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4
----------	------

제출연월일 : 2017. 0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수도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 나. 철거한 급수설비의 시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8조)
- 다.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함(안 제50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수도법」 제38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 가. 입법예고기간 : 2017년 7월 7일 ~ 7월 27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협의결과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상하수과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 를 “하남시”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시의” 를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의” 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을 “60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상수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상수도과장 한상용
	팀장 직위·성명	공무팀장 박종진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박종진 (790-541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u>하남시(이하 “시”라 한다)</u> 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하남시</u> ----- ----- -----.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u>시의</u> 관할구역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 <u>하남시(이하 “시”라 한다)</u> 의 ----- ----- ----- ----- -----.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② (생략) ③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②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u>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90일</u>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이의신청) ①----- ----- ----- <u>60일</u> -----

현행	개정안
<p>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② (생략)</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와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